

# 한국의 인구감소지역 정책과 과제

---

2019. 11.

김현호(지역발전포용실장)



# Contents

1. 인구감소의 현주소
2. 인구감소지역의 정책
3.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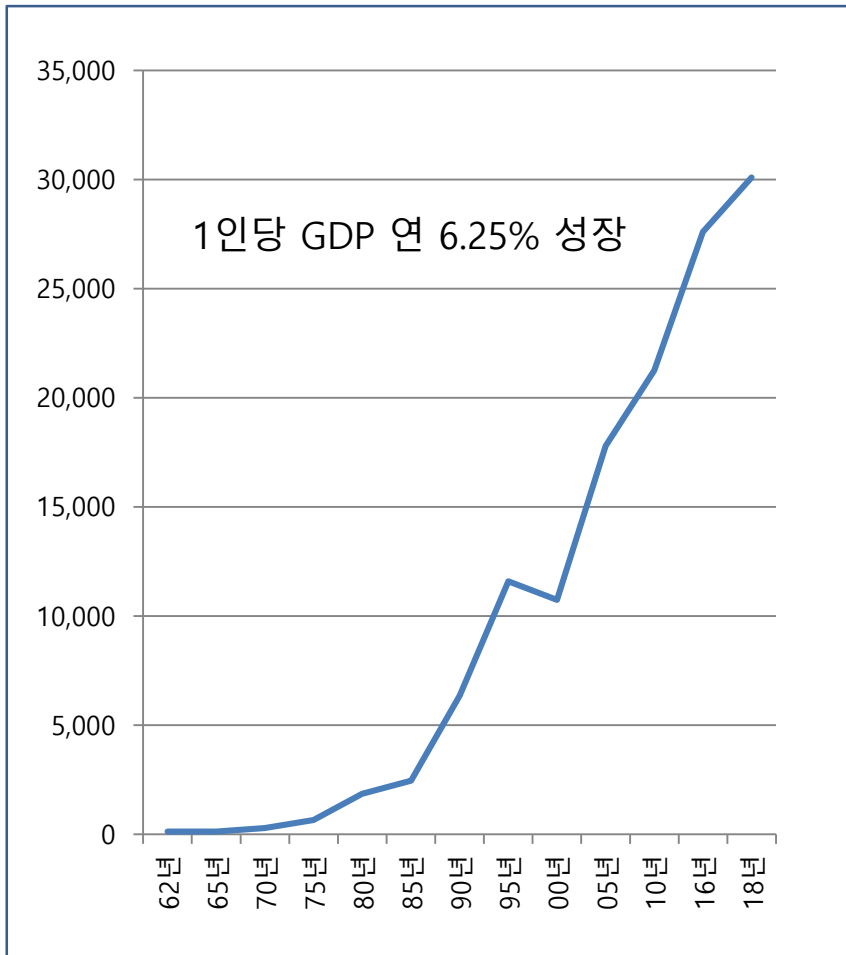
---

# 인구감소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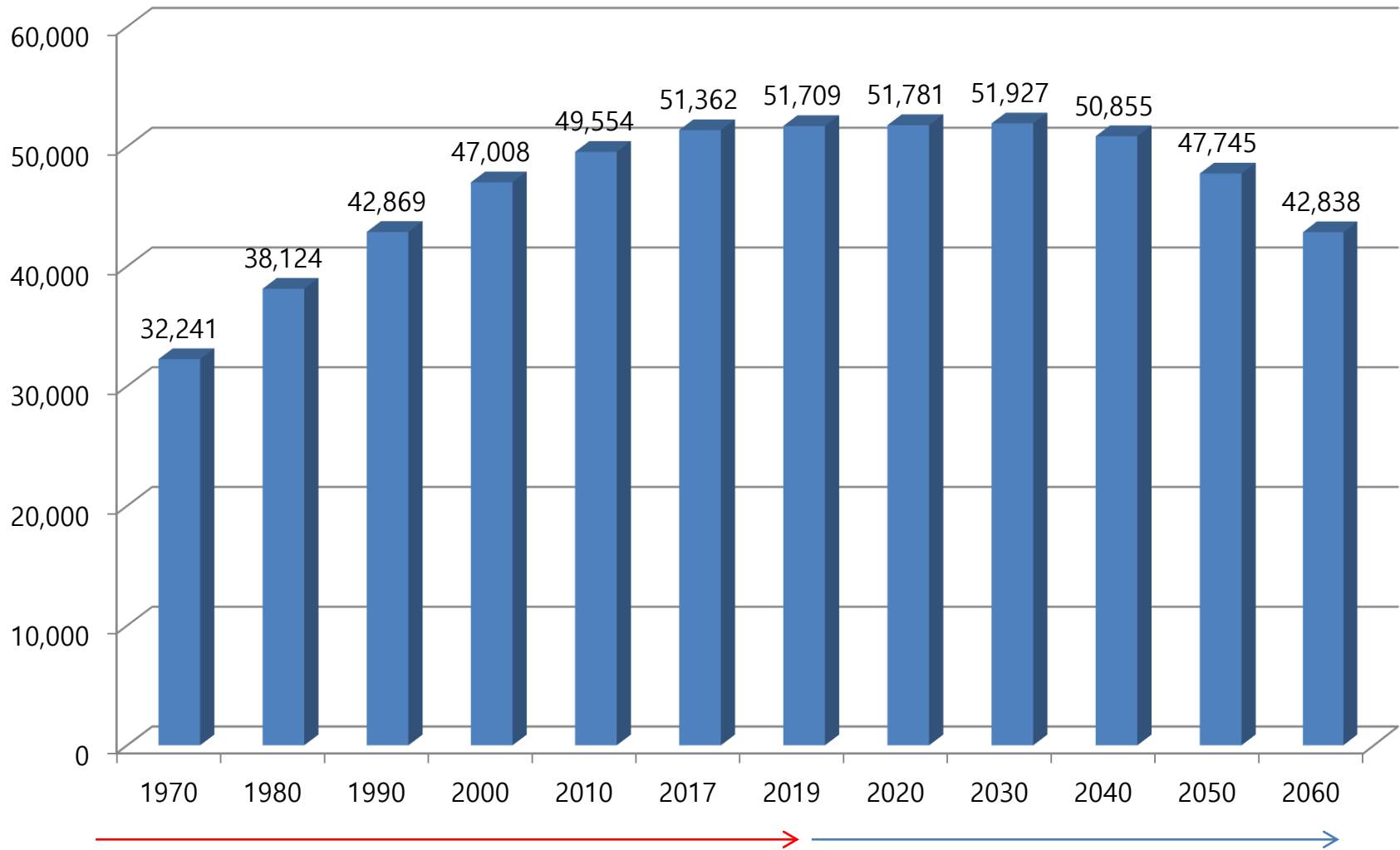
---

# 2018년 30-50 Club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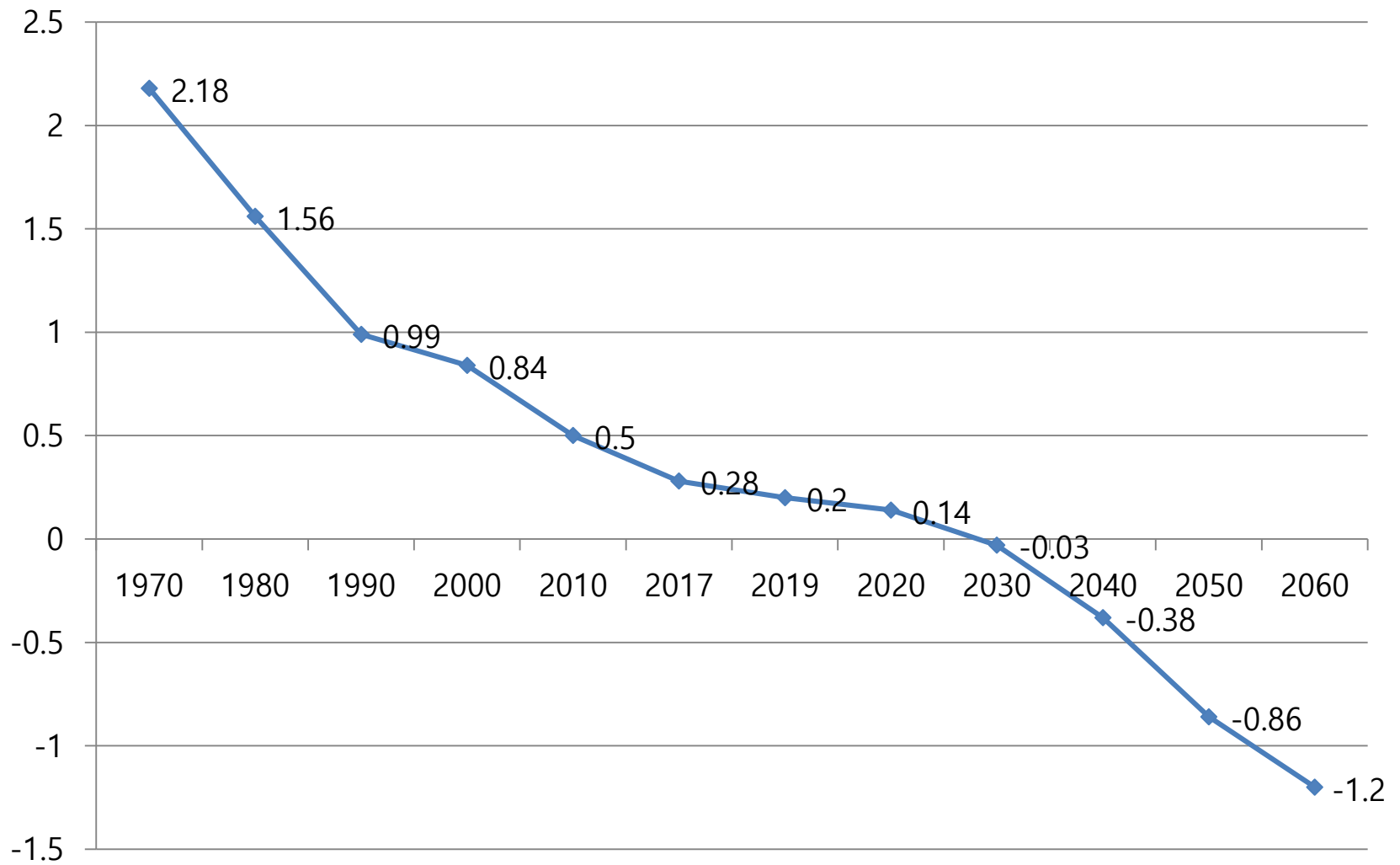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천만명,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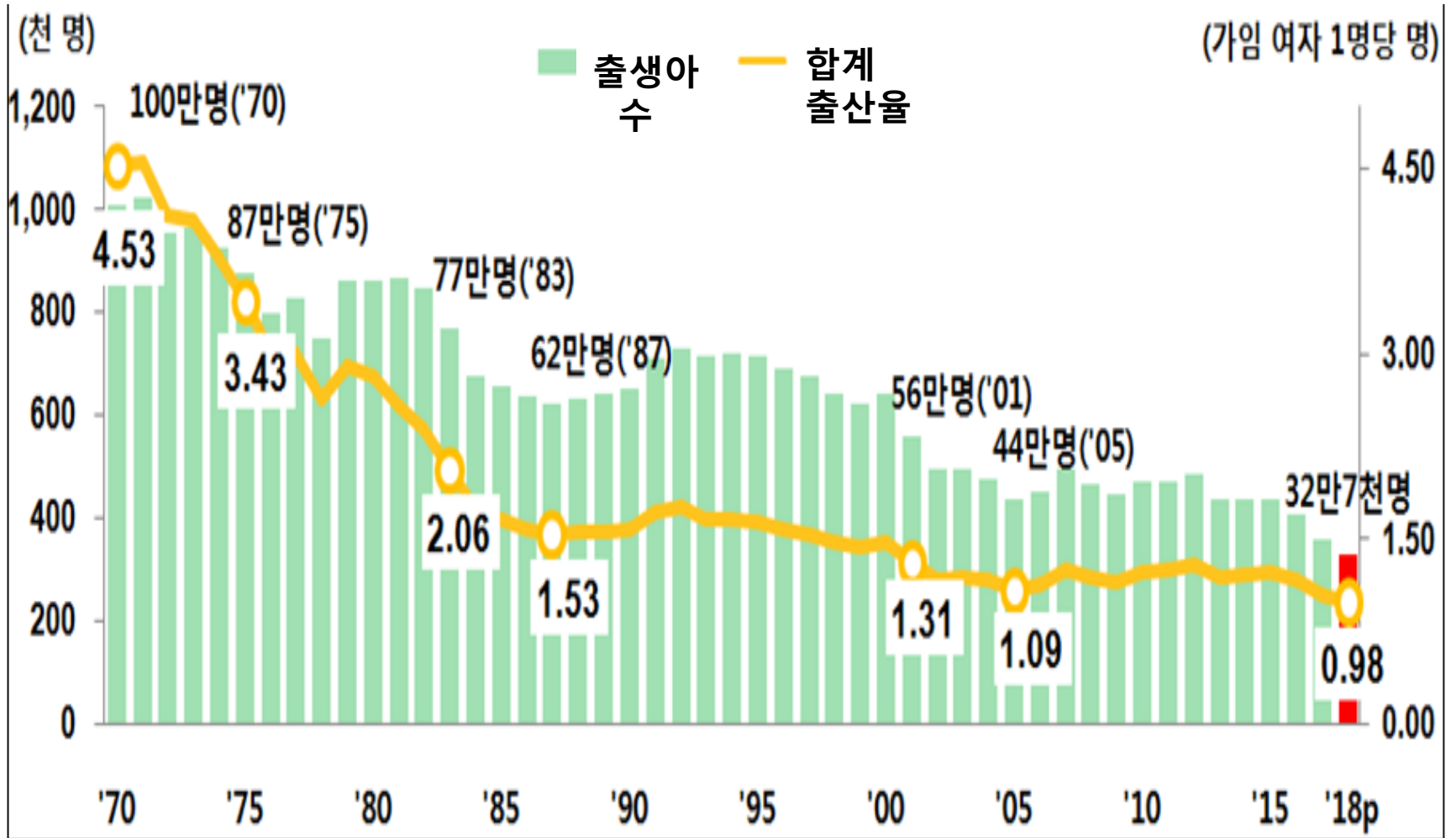
# 전국 인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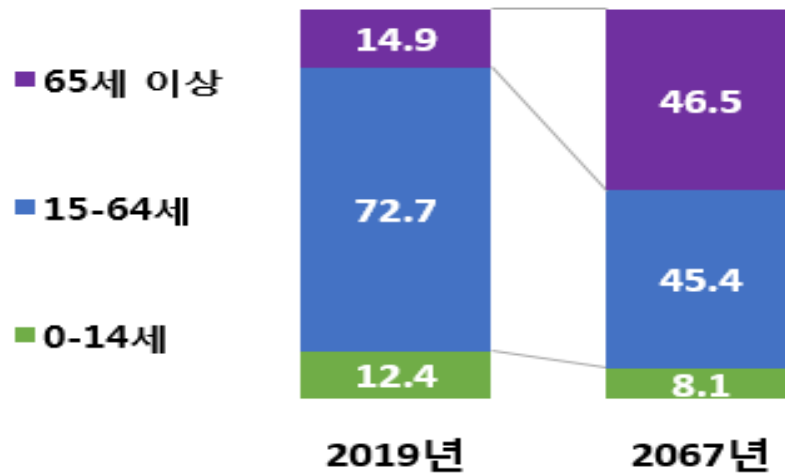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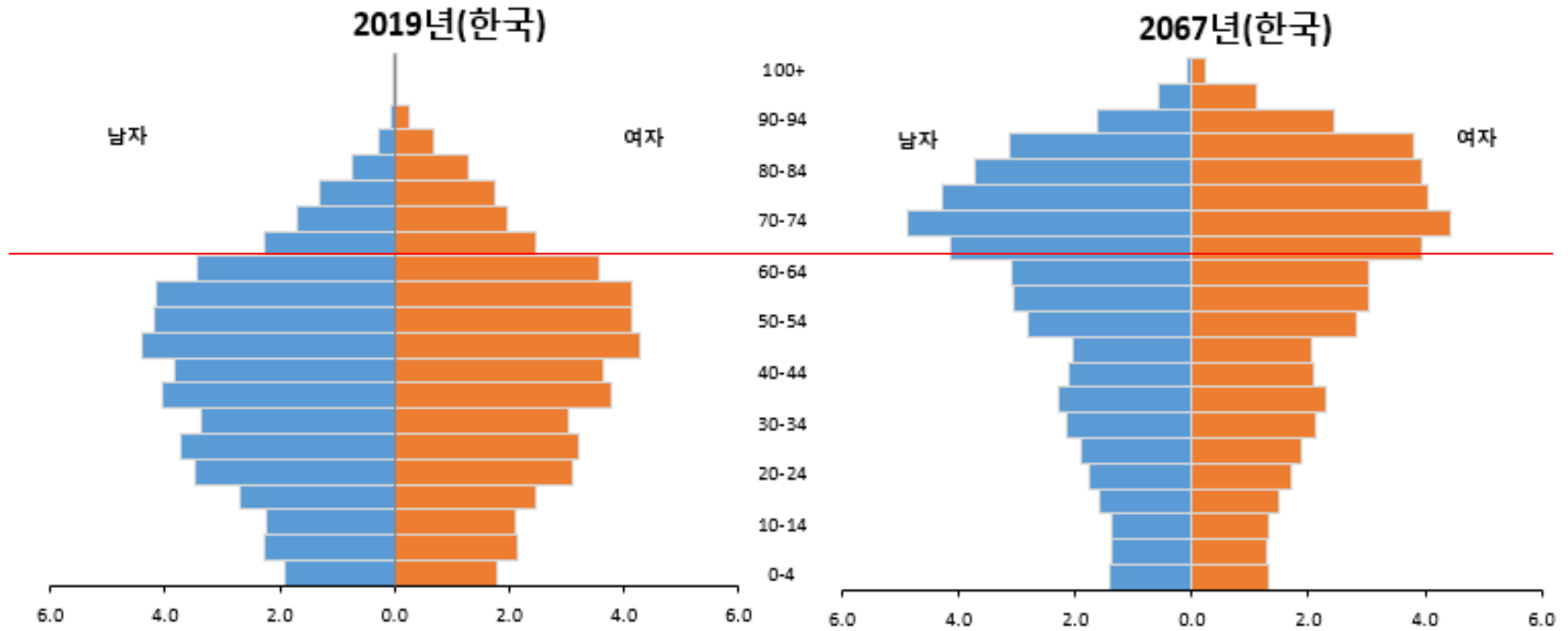
# 인구 성장율의 변화



# 출산율과 출생아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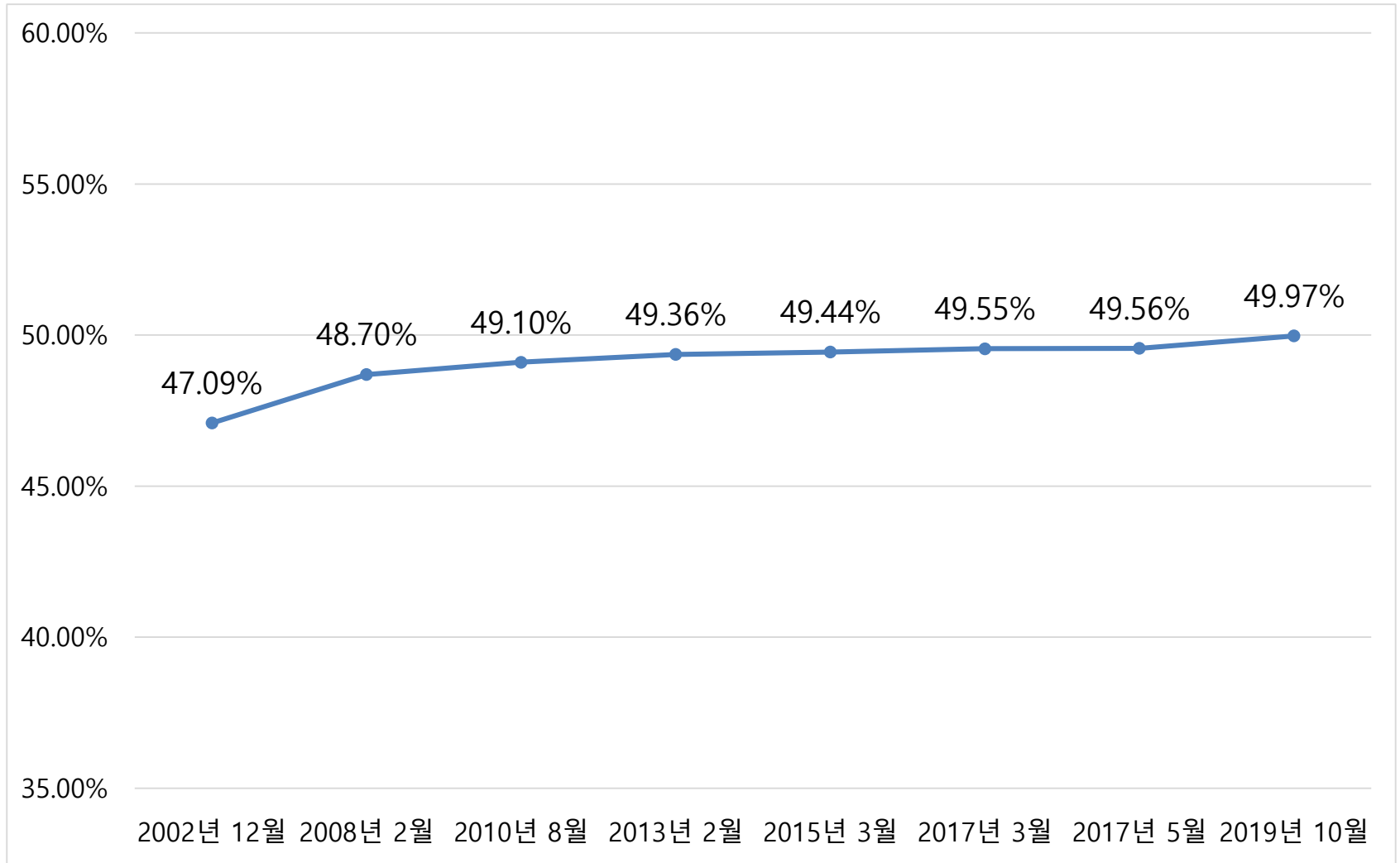


# 인구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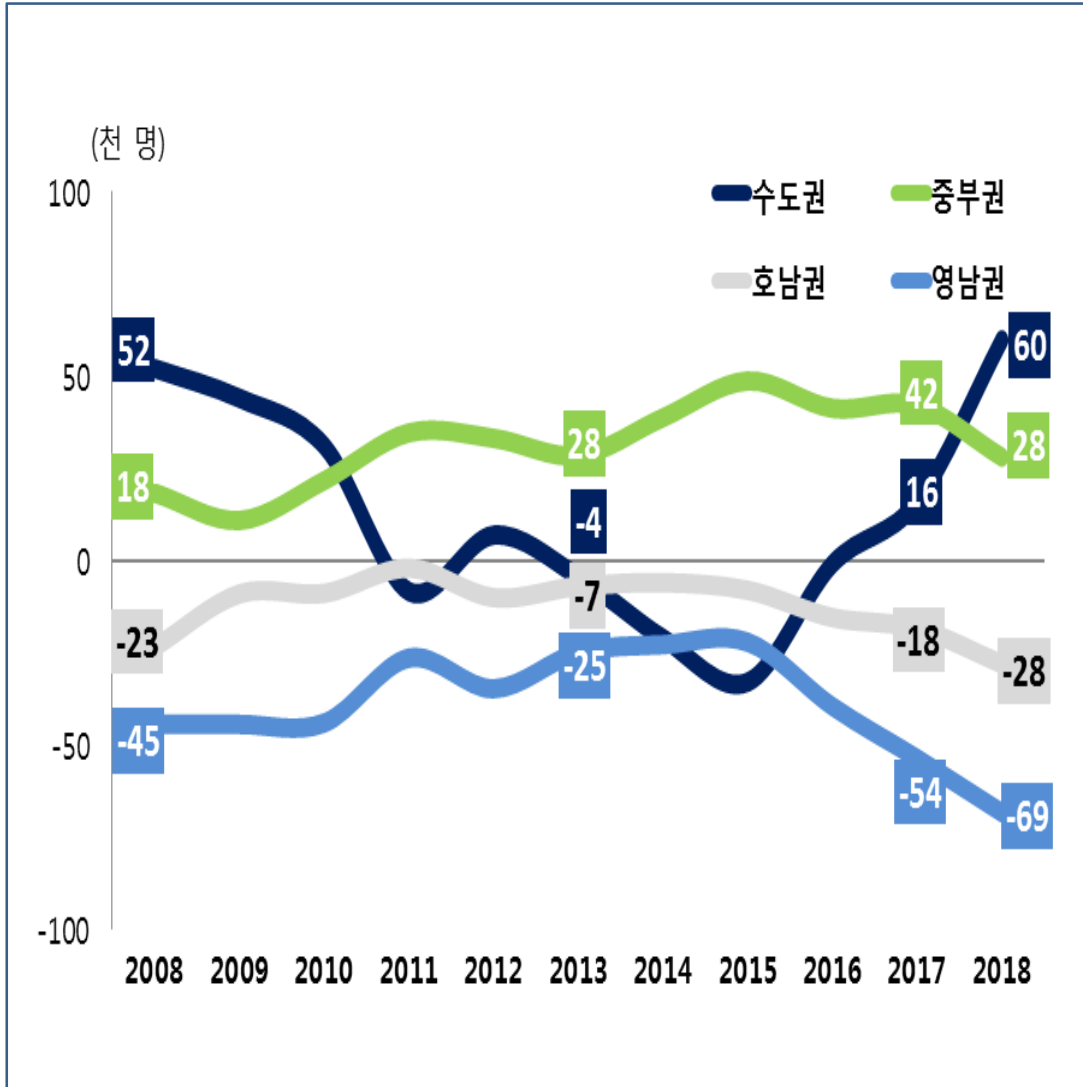


#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의 변화



# 권역간 인구의 이동

권역간 이동자 수 추이(2008-2018, 단위: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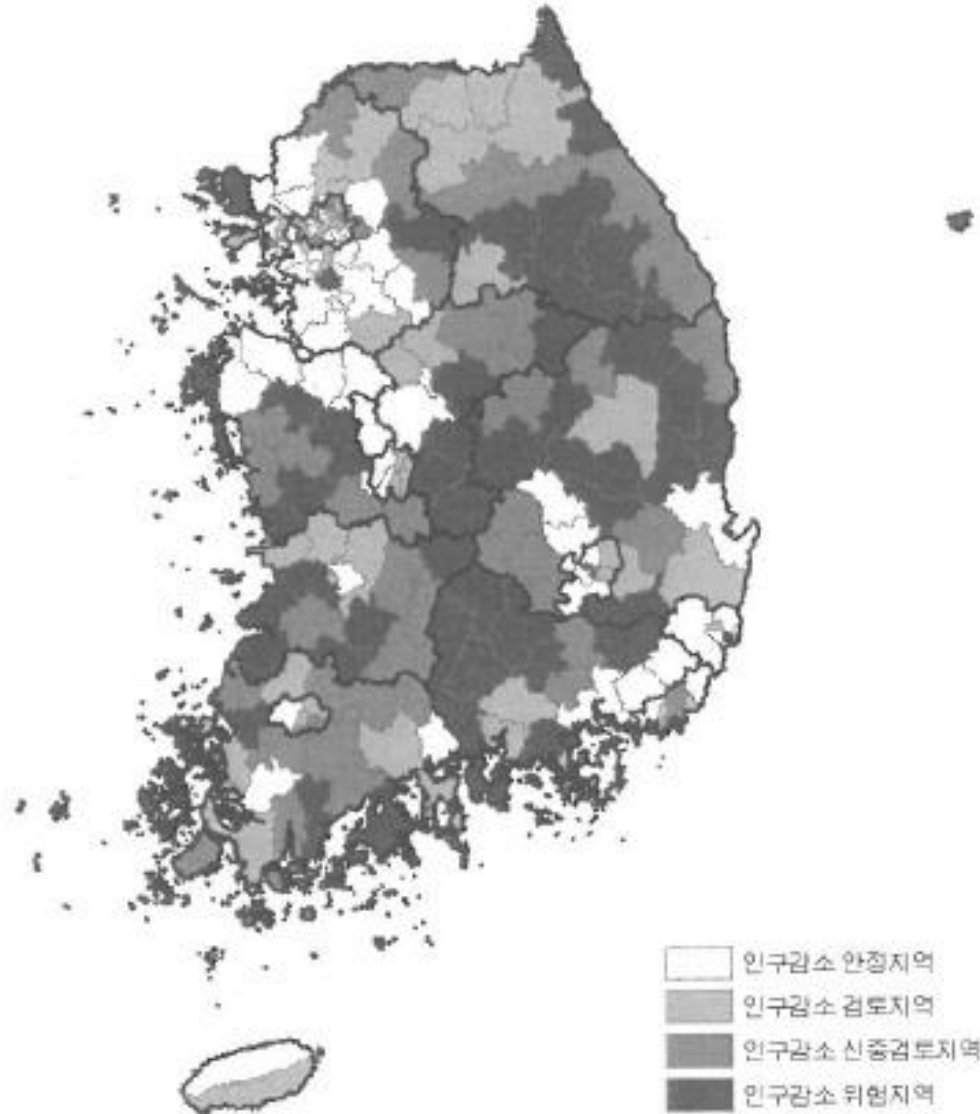


2018년 권역간 이동자수 (단위:천명)



전출 전입	전 체 (제주 제외)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65	-	-6	20	51
중부권	28	6	-	8	15
호남권	-28	-20	-8	-	1
영남권	-66	-51	-15	-1	-

# 지방소멸 위험지역



228개 시군구 중  
75개 (32.8%)

출처: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 지역의 인구감소 및 증가 유형

## ▣ 총괄 (200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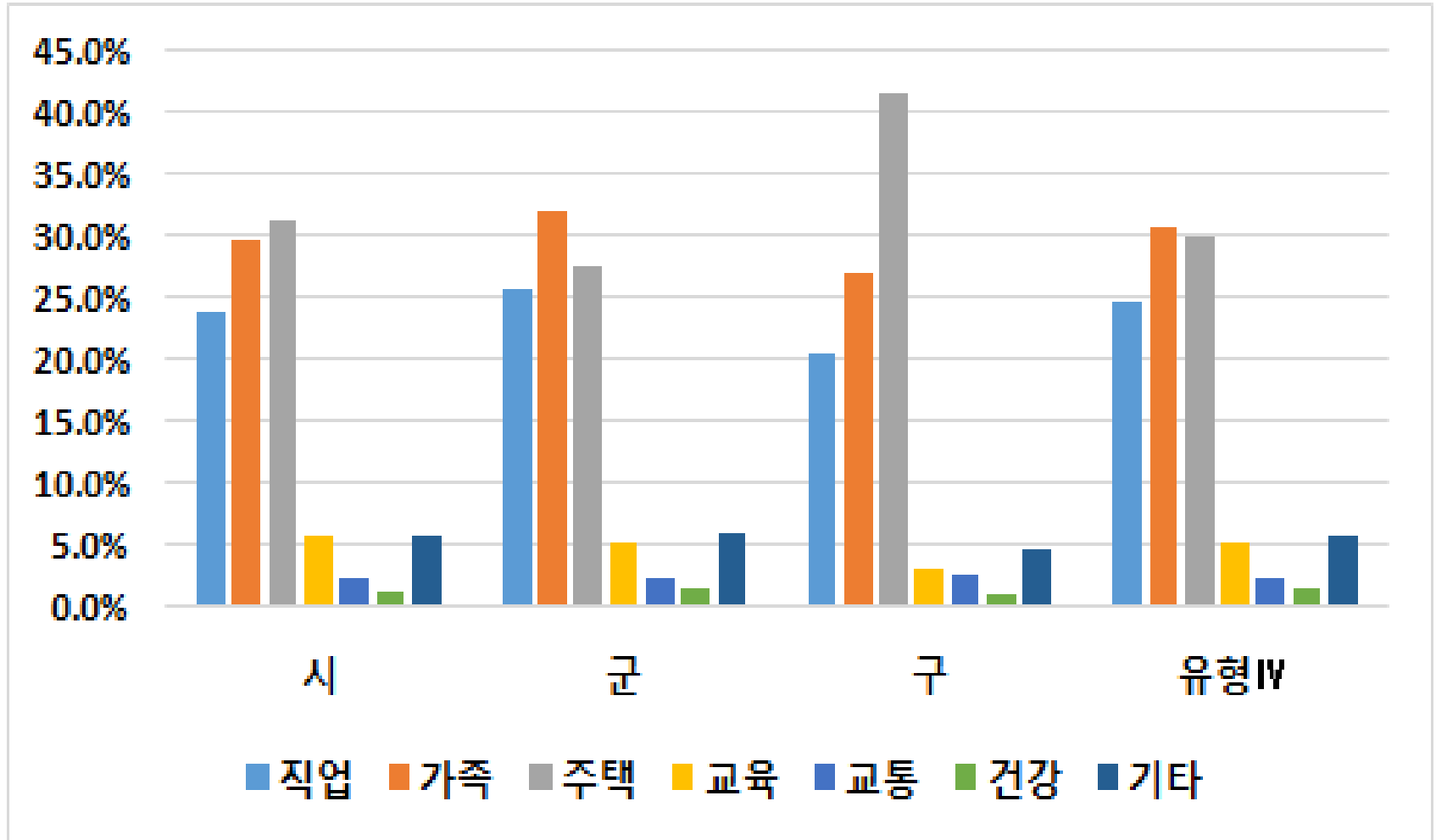
구분	자연증감	사회증감	유형	개수	비율	시	군	구
총 인구 증가 지역	+	+	유형Ⅰ	52	23.0%	35	8	9
	+	-	유형Ⅱ	28	12.4%	12	2	14
	-	+	유형Ⅲ	8	3.5%	-	8	-
	소계			88	38.9%	47	18	23
총 인구 감소 지역	-	-	유형Ⅳ	77	34.1%	14	59	4
	+	-	유형Ⅴ	61	27.0%	14	5	42
	소계			138	61.1%	28	64	46
계				226	100.0%	75	82	69

## ▣ 군 지역

구분	유형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82개)		5	3	11	8	7	8	17	13	10
총 인구 증가 지역 (18개)	소계	5	2	3	3	1	1	1	1	1
	유형 I (++) (8개)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완주군		칠곡군	
	유형 II (+-) (2개)			화천군, 양구군						
	유형 III (+-) (8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양평군	횡성군		홍성군		무안군		함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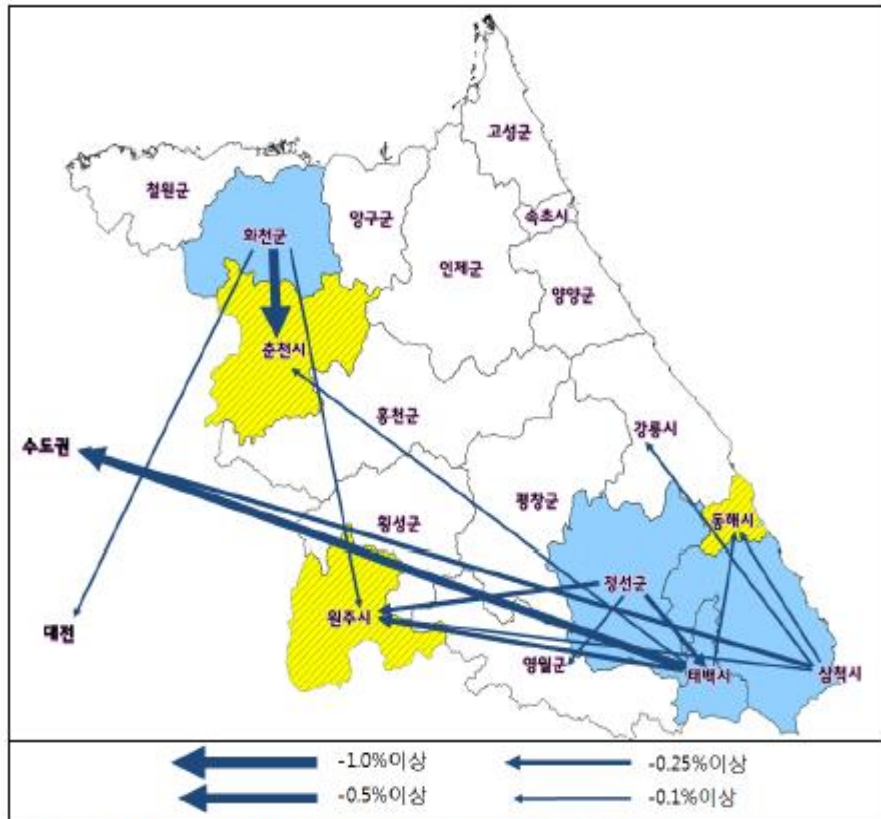
구분	유형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 인구 감소 지역 (64개)	소계		1	8	5	6	7	16	12	9
	유형 IV (--) (59개)			홍천군, 군위군, 의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부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송양군, 청영도, 영청고성, 예봉울릉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하산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유형 V (+-) (5개)		연천군	철원군, 인제군				화순군, 영암군		

## ▣ 유출원인 (IV유형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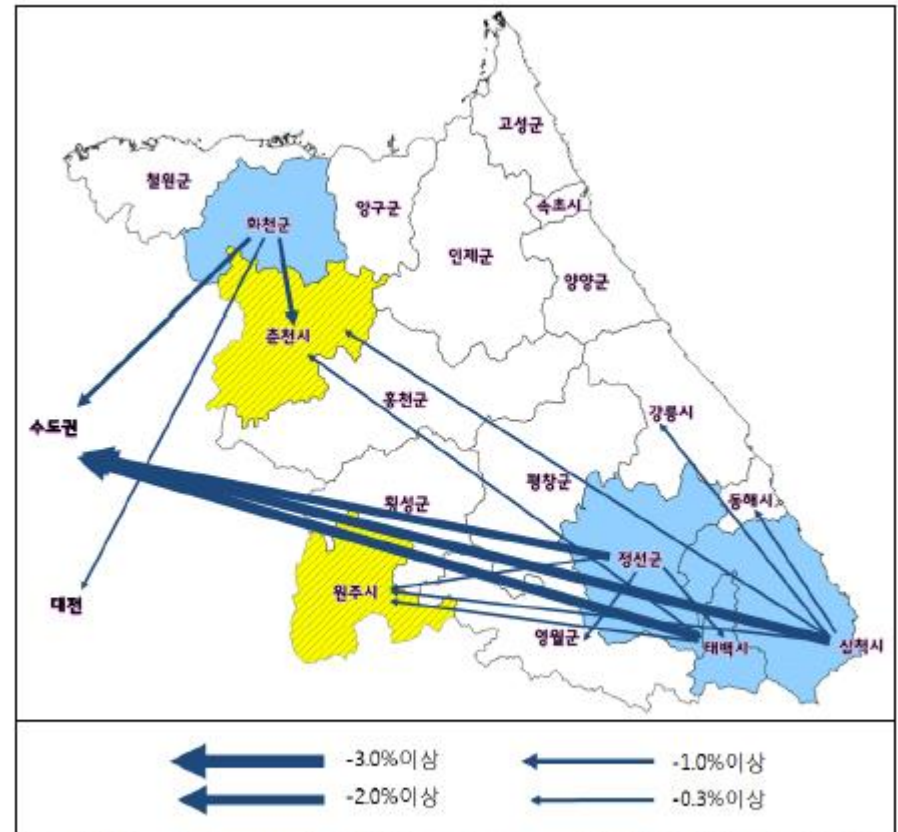
# 지역간 인구이동 현황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전체 연령): 2015~2017년



주: 각 지역별 최근 3년(2015~2017) 간 순이동률 합계를 평균하여 산출.  
 자료: 통계청 KOSIS, (2018a), 국내인구이동통계(2015~2017)[데이터파일]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20~34세): 201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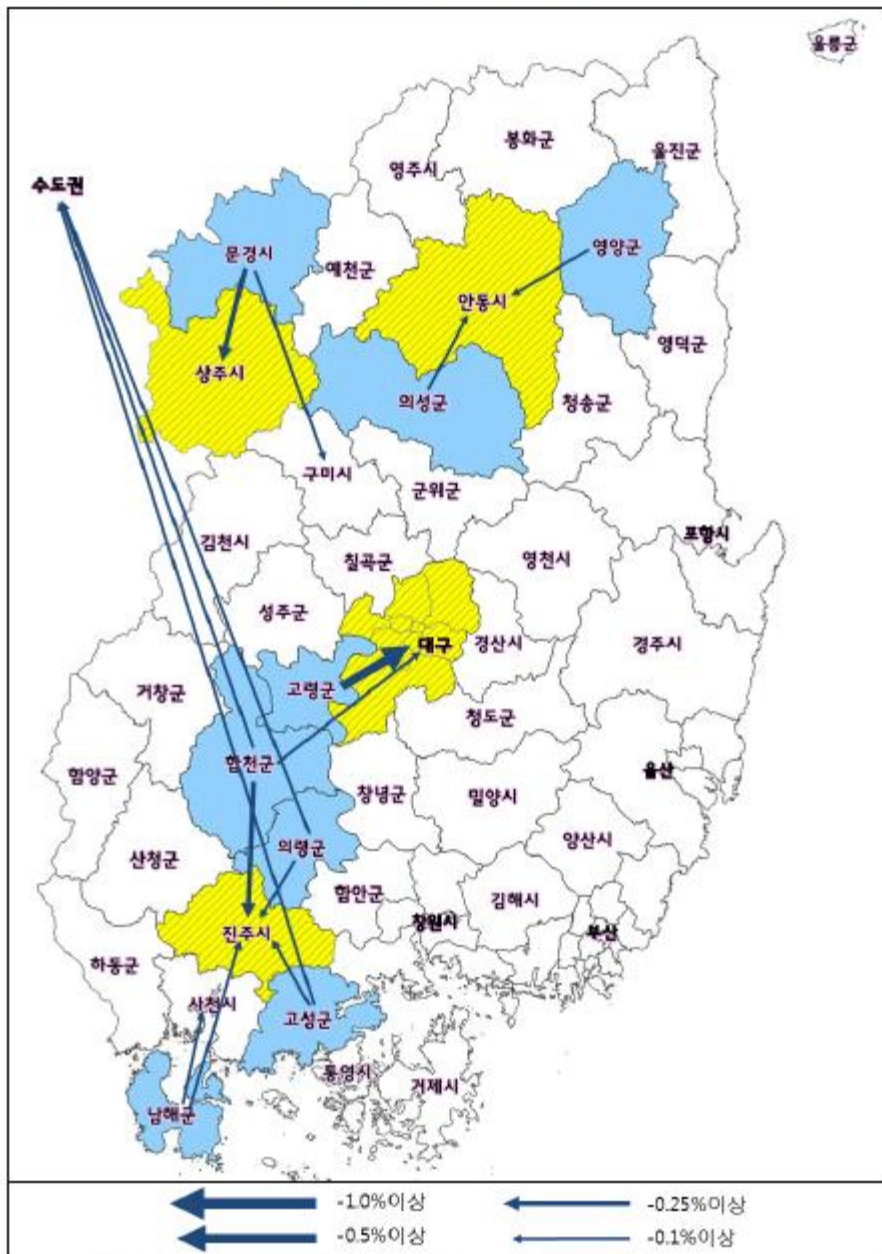


주: 연령별(20~24, 25~29, 30~34), 지역별 최근 3년(2015~2017) 간 순이동률 합계를 평균하여 산출.  
 자료: 통계청 KOSIS, (2018a), 국내인구이동통계(2015~2017)[데이터파일]

출처 : 이상림(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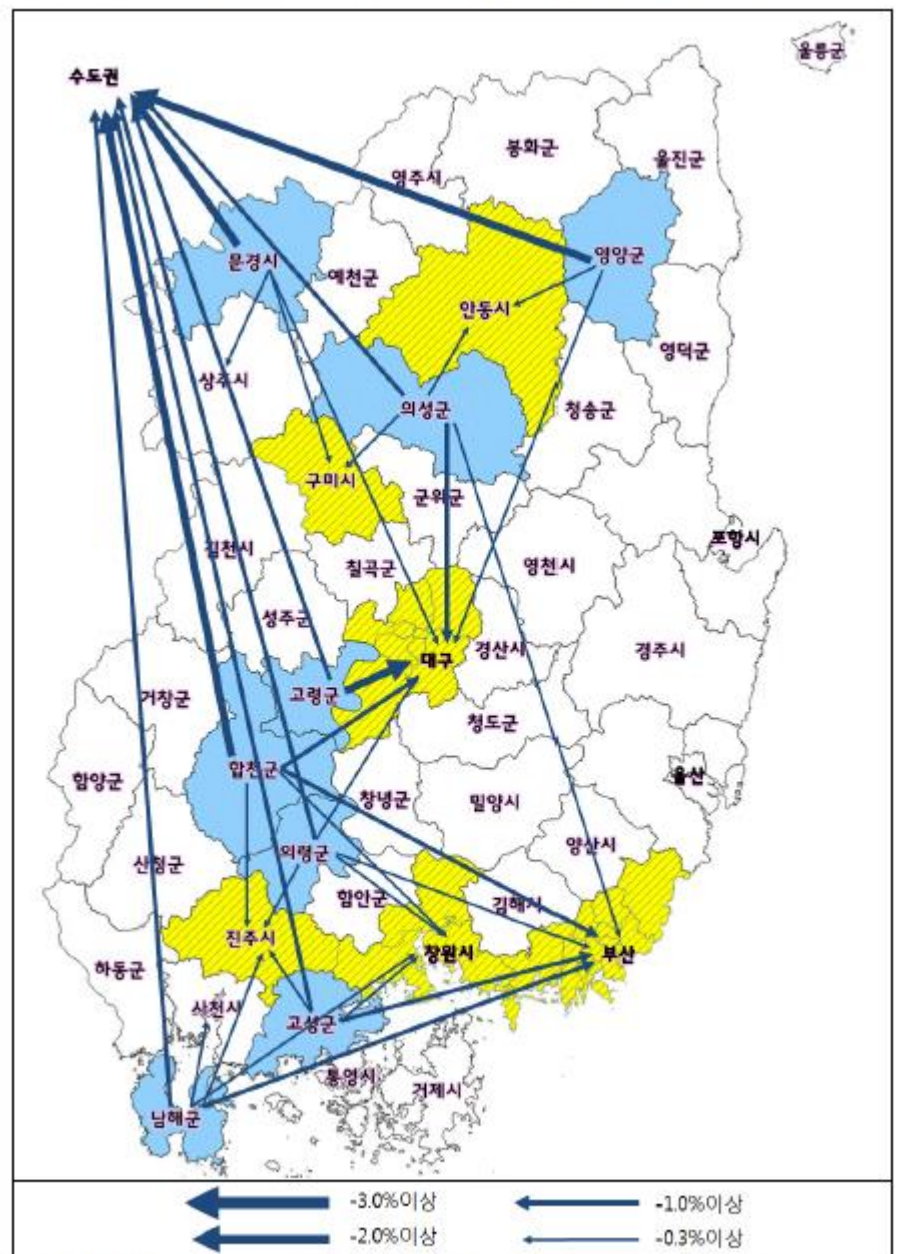


경상권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전체 연령): 2015~2017년



주: 각 지역별 최근 3년(2015~2017) 간 순이동률 합계를 평균하여 산출.  
 자료: 통계청 KOSIS. (2018a). 국내인구이동통계(2015~2017)[데이터파일]

경상권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유출지(20~34세): 201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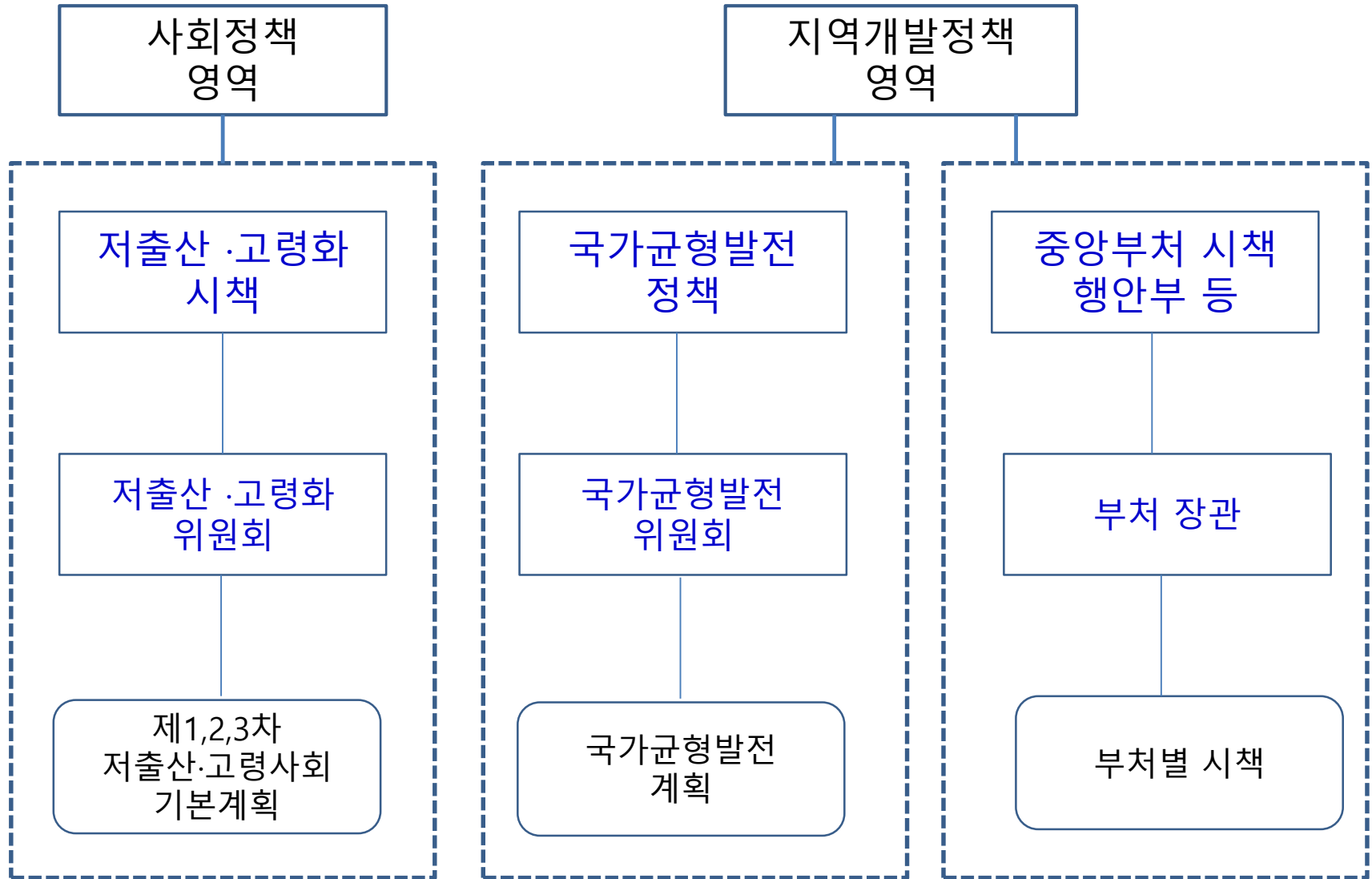
주: 연령별(20-24, 25-29, 30-34), 지역별 최근 3년(2015~2017) 간 순이동률 합계를 평균하여 산출.  
 자료: 통계청 KOSIS. (2018a). 국내인구이동통계(2015~2017)[데이터파일]

---

#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

# 인구감소지역 관련 시책의 프레임



# 저출산 고령화 시책의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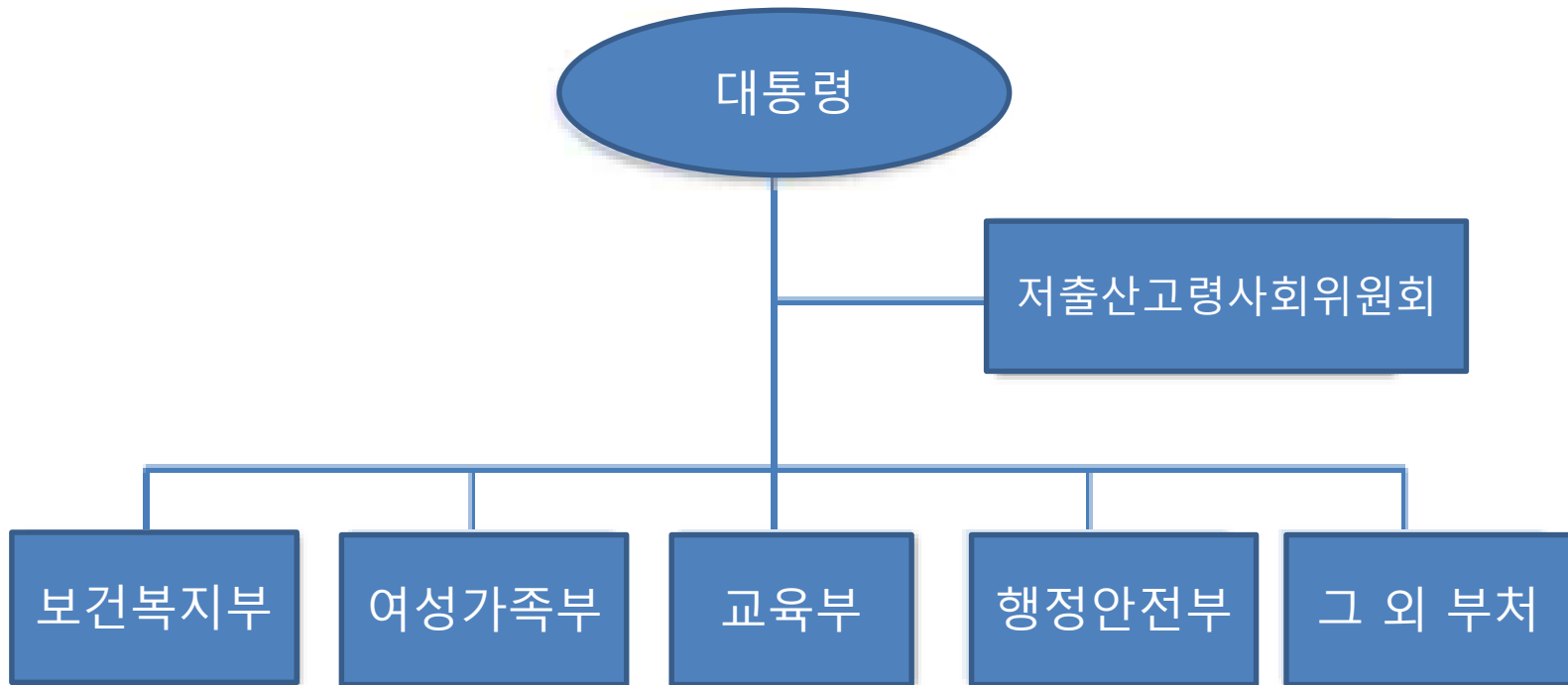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2005년 법률 제정, 목적(제1조)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대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4조) :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 수립
- 저출산 대책(제7조~제10조) : 인구정책, 인구교육, 출산 및 보육, 모자보건 증진 등
- 고령사회정책(제11조~19조) :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평생교육, 고령산업육성 등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 : 4대분야 234개 과제 추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 : 3대분야 231개 과제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16~2018년 동안 추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수정계획 : 2019~ 현재 추진

## 추진체계



출처: 강영주,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목표와 전략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li> <li>-청년고용 활성화</li> <li>-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소득보장 강화</li> <li>-1인 1국민연금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li> <li>-주택연금 등 활성화로 노후보장수준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li> <li>-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확대</li> <li>-포용적 가족형태 인식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li> <li>-간병·치매·호스피스 등 의료·돌봄강화</li> <li>-고령자 교통·생활안전 환경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li> <li>-맞춤형 보육·돌봄 확대</li> <li>-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확대</li> <li>-여성·고령친화 고용시스템 전환</li> <li>-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li> <li>-양성이 평등한 일·가정양립</li> <li>-중소기업·비정규직의 육아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li> <li>-분야별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li> <li>-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생태계 조성</li> </ul>

출처: 박진경·김상민, 2017

# ▣ 부처별 시책

구분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보건 복지 부	임신 출산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 의료비(행복출산패키지)</li> <li>- 안전한 분만환경조성</li> <li>-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li> <li>- 산모·신생아 지원확대(건강관리)</li> <li>- 임신·출산 사회적 배려강화</li> <li>- 여성건강증진강화(자궁경부암 등)</li> </ul>	노후 소득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1국민연금확립(두루누리지원, 실업크레딧 지원)</li> <li>-기초연금 내실화</li> <li>-노후준비 인프라확충</li> <li>-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재정지원 시장형 일자리)</li> </ul>
	아동 가족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분유지원</li> <li>-입양아동 양육지원확대(수당지원)</li> <li>-아동친화도시인증, 영양플러스 지원, 드림스타트</li> <li>-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li> </ul>	건강 의료 안전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강화</li> <li>-고령자 정신건강관리강화(노인자살예방 시범사업)</li> <li>-노인의료비 부담경감(인공관절)</li> <li>-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li> <li>-호스피스 활성화 / 노인학대 예방</li> <li>-노인안심생활지원(독거노인 돌봄서비스)</li> <li>-T연계 원격의료 서비스 확산 및 제도화</li> </ul>
	양육 보육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개편</li> <li>-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충</li> <li>-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li> </ul>	여가 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경로당, 노인복지관 자원봉사클럽)</li> <li>-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 재능기부)</li> </ul>
교육 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li> <li>-초등돌봄교실 운영</li> <li>-교육·고용체계 개편(자유학기제 확산 등)</li> <li>-다자녀(셋째)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li> </ul>	평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교육기반확충(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li> <li>-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li> </ul>

구분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국토 교통 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li> <li>-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li> <li>-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li> <li>-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확대</li> </ul>	고령자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확대</li> <li>- 공공실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li> <li>-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지원</li> <li>- 원스톱 주거지원안내시스템 구축</li> </ul>
고용 노동 부	일 가정 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가정양립 근무환경 조성</li> <li>- 중소기업 실천여건 확충(육아휴직)</li> <li>- 남성육아참여 활성화(육아휴직급여)</li> </ul>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개인연금 확산 정착</li> </ul>
	청년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청년일자리 창출노력 지원</li> <li>-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대학창조 일자리센터 등)</li> </ul>	취업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li> <li>- 중고령자 창업지원</li> <li>-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li> </ul>
여성 가족 부	청소년 일 가정 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li> <li>-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li> <li>- 공동육아 나눔터</li> <li>-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li> <li>-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li> </ul>	-	



#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재구조화

구분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대응기반 분야		전체	
	과제 수	예산 (억)	과제 수	예산 (억)	과제 수	예산 (억)	과제 수	예산 (억)
역량집중과제	18	106,139	17	157,184	0	0	35	263,324,
계획관리과제	29	99,031	31	6,033	5	90	65	105,153
부처자율과제	42	58,020	49	4,888	3	9	94	62,917
계	89	263,190	97	168,105	8	99	194	431,394

출처: 보건복지부, 2019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기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1.16 )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 9대 전략 중 공간부문의 전략

3대 전략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의 핵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 (농식품부)</li> <li>2. 불편 없는 농촌 '3·6·5 생활권' 구축 (농식품부)</li> <li>3.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회복 (농식품부, 환경부)</li> <li>4.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 (해수부)</li> <li>5. 맞춤형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 (농식품부, 해수부)</li> <li>6.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부, 새만금청, 해수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국토부)</li> <li>2. 지역과 지역주민이 주도-상생 (국토부)</li> <li>3.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기반 확립 (국토부)</li> <li>4. 효율적 교통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향상 (국토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을 거주 강소지역으로</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행안부)</li> <li>2.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역량 강화 및 활력촉진 (행안부)</li> <li>3.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행안부)</li> <li>4. 성장촉진지역·농어촌지역 개발 활성화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li> </ol>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1),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8-

# 부처별 시책 중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 행정안전부 특교세 사업으로 추진(17년부터~19년)
-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으로 추진(17년 9개, 18년 11개, 19년 5개 지역 선정)

구분	내용
목적	-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삶의 질을 보장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포용적 균형발전을 촉진
대상	- 인구감소지역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시군구
방식	- 공모방식 : 시군구→시도→행안부(1차 서면, 2차 현장, 3차 발표평가)
재원지원	- 매칭방식 : 특교세 60%, 지방비 40% - 2019년 : 총사업비 40억 (특교세 24억, 지방비 16억) 2018년 : 총사업비 150억원(특교세 90억, 지방비 60억) 2017년 : 총사업비 147억원(특교세 88, 지방비 59)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유형

사업유형	사업 내용	사업예시
지역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의 자원·특산물·전통산업을 활용하여 경제자립 기반확대</li> <li>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관협업에 의한 지역활력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 역사 등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li> <li>창고를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등 조성</li> </ul>
생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화마을 조성</li> <li>중심지에 공동시설 기능 집중 배치</li> <li>문화·복지 시설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li> </ul>	
ICT 기반 스마트 타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타운 서비스 발굴 및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주민센터</li> <li>스마트시티</li> <li>독거노인 u-Care 시스템</li> <li>버스정보 시스템 등</li> </ul>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시설의 다기능화</li> <li>지자체 간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활용</li> <li>계층 간 신속한 서비스 공급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시설 통합</li> <li>생활시설 융합</li> </ul>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청소년·여성·농어민·노인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li> <li>전문가·활동가·지역주민 등 민관협력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민 정보교류·쉼터</li> <li>노인 공동 홈</li> <li>청소년 방과 후 교실 등</li> </ul>

# 19년 지원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유형

자치단체	사업명 및 사업내용
강원 정선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명) 청장년 핫스팟(Hot Spot) 연결 사업</li> <li>▶(사업내용) 38국도를 따라 연결되는 정선군 관내 카지노 인접지역에 청장년 핵심활력거점으로서 세 개의 핫스팟(Hot Spot)*을 구축하여 지역별 사업을 연계하고 고립된 개척자들을 연결함으로써 군(郡) 단위 규모의 경제를 실현의 귀향·귀촌 생활 인프라 조성</li> </ul>
충남 홍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명)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li> <li>▶(사업내용) 폐창고 활용하여 푸드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청년 창업가·지역민·지역 대학생 등 지역 구성원이 소통·교류하는 복합문화창업공간 구축·운영</li> </ul>
전북 순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명) 20·30세대 "유스토피아 삶의 터" 조성</li> <li>▶(사업내용) 청년들에게 거주 공간 저렴 제공하는 한편, '청년농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영농 창업 기회 제공, '청년과 지역농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작목재배기술 공유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주거지원+농장임대지원 ⇒ 농업창업 ⇒ 안정적 정착</li> </ul>
전남 영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명)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li> <li>▶(사업내용) 청년점포, 매일시장 인근 부지에 청년종합소통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스터디룸·회의실 등 공간 나눔, 창업 인큐베이팅, 청년 워크숍 네트워크 구축* 지원</li> </ul>
경북 청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명) 청년의 꿈 수제맥주에 "청맥향"을 입히다</li> <li>▶(사업내용) 감, 복숭아로 주조한 수제맥주(청맥향*) 활용해서 양조장·판매장 건립, 청년·귀농인 대상 귀농영농교육 제공, 홈 브루어리(Home brewery) 체험, 시음 공간 조성</li> </ul>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기재부 주관  
범부처 TF  
인구정책

4대 핵심전략		인구정책 20개 정책과제
생산연령인구 확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고용반)</li> <li>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고용반)</li> <li>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정책 통합(외국인정책반)</li> </ol>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저출산 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차 기본계획 이행 및 제4차 수립(저출산고령사회위)</li> </ol>
	학령인구 감소 적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교육반)</li> <li>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교육반)</li> </ol>
	병역자원 효율적 활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국방반)</li> <li>군인력 획득체계 개선(국방반)</li> </ol>
	지역활력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생활 서비스 체계 개편(지역반)</li> <li>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지역반)</li> <li>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지역반)</li> </ol>
고령인구 증가 대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산업반)</li> <li>고령친화 신산업 육성(산업반)</li> <li>주택정책 방향 전환(국토반)</li> <li>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국토반)</li> <li>주택연금 활성화(금융반)</li> <li>퇴직·개인연금 활성화(금융반)</li> </ol>
복지지출 증가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관리시스템 개선(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재정반)</li> <li>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복지반)</li> <li>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복지반)</li> </ol>

#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책

## ▣ 경북 :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 목적 :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
- 사업분야
  - 지역자원과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판매
  - 미술, 음악, 사진 등 청년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 전시·체험공간, 일반창업 등
  - 기타 지역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
- 사업대상지 : 읍·면 단위 시골마을 지역
- 지원내용 <https://tv.naver.com/v/10987641>
  - ① 지원금 지원: 1인 기준 30백만원 ※ 예시: 2인 팀 기준 시 60백만원
  - ② 별도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지원

정착활동비	사업추진 운영비(지역자원조사비, 주택임대차, 교통비 등 사업추진 간접경비)
사업화 자금	사업추진 직접 소요 경비 (원재료비, 공간 및 장비 임차,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 직접 경비)





새싹 땅콩을 설명하고 있는 이강우 대표 / 신아푸드 제공



# 기초 지자체 시책 사례

---

## ▣ 전남 : 구례 자연드림파크

- 기존의 농공단지를 소프트한 고용창출 지역으로 변모
- 구례 IC 옆 15만 M2 (4만 5천평)
- 아이쿱 생협 자회사 및 거래처 19개 공방 입주
  - 물류센터, 영화관, 기숙사, 비어하우스, 팬션 등 관광형 산업단지
  - 공방 견학, 농사, 요리, 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유기농 콩나물, 현미, 라면, 김치, 돈까스, 막걸리 등 생산
- 지역주민 464명 고용, 지역농산물 41억 판매('16년 기준)
- 연간 14만명 방문, 락 페스티벌 개최
- 도시지역 유통망을 갖춘 협동조합, 농식품 가공기업, 지역주민의 합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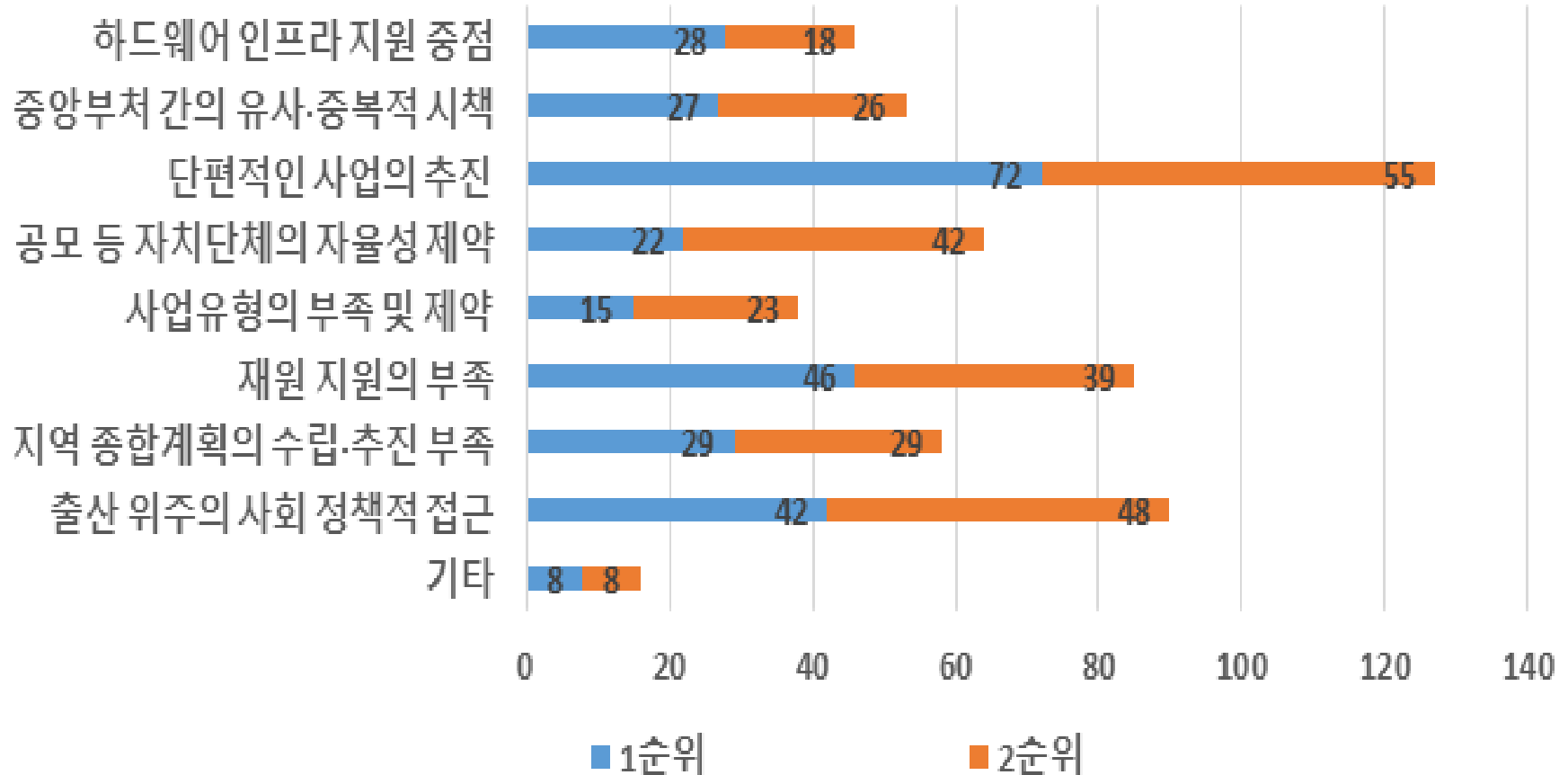
---

#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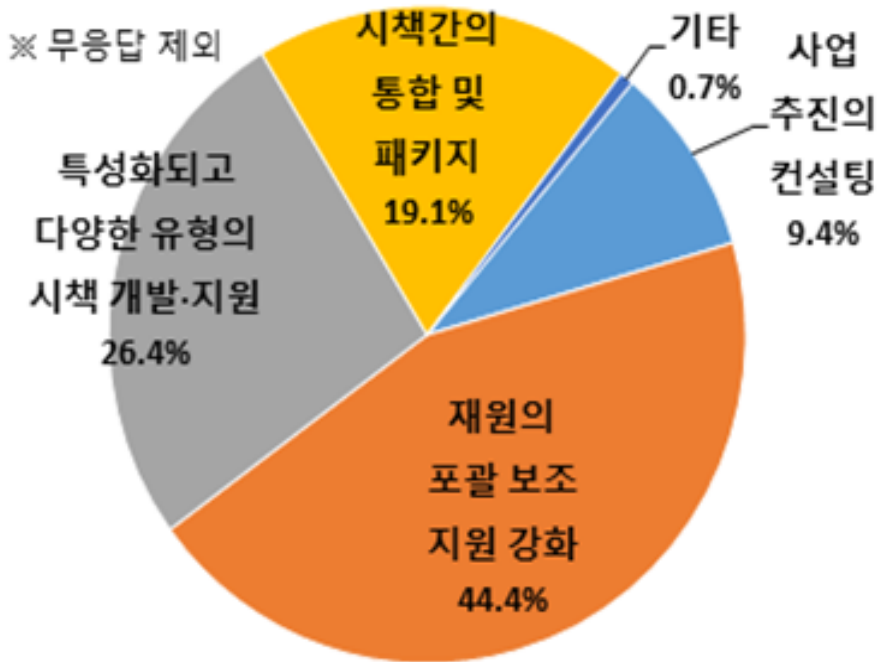
---

# 중앙정부 시책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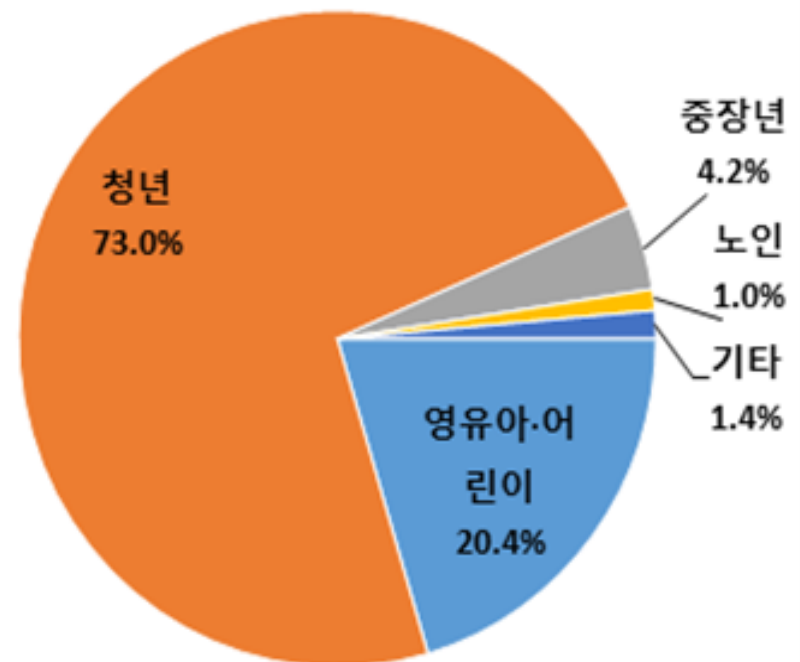
## ▣ 중앙정부 시책의 문제점



## ▣ 중앙부처 지원,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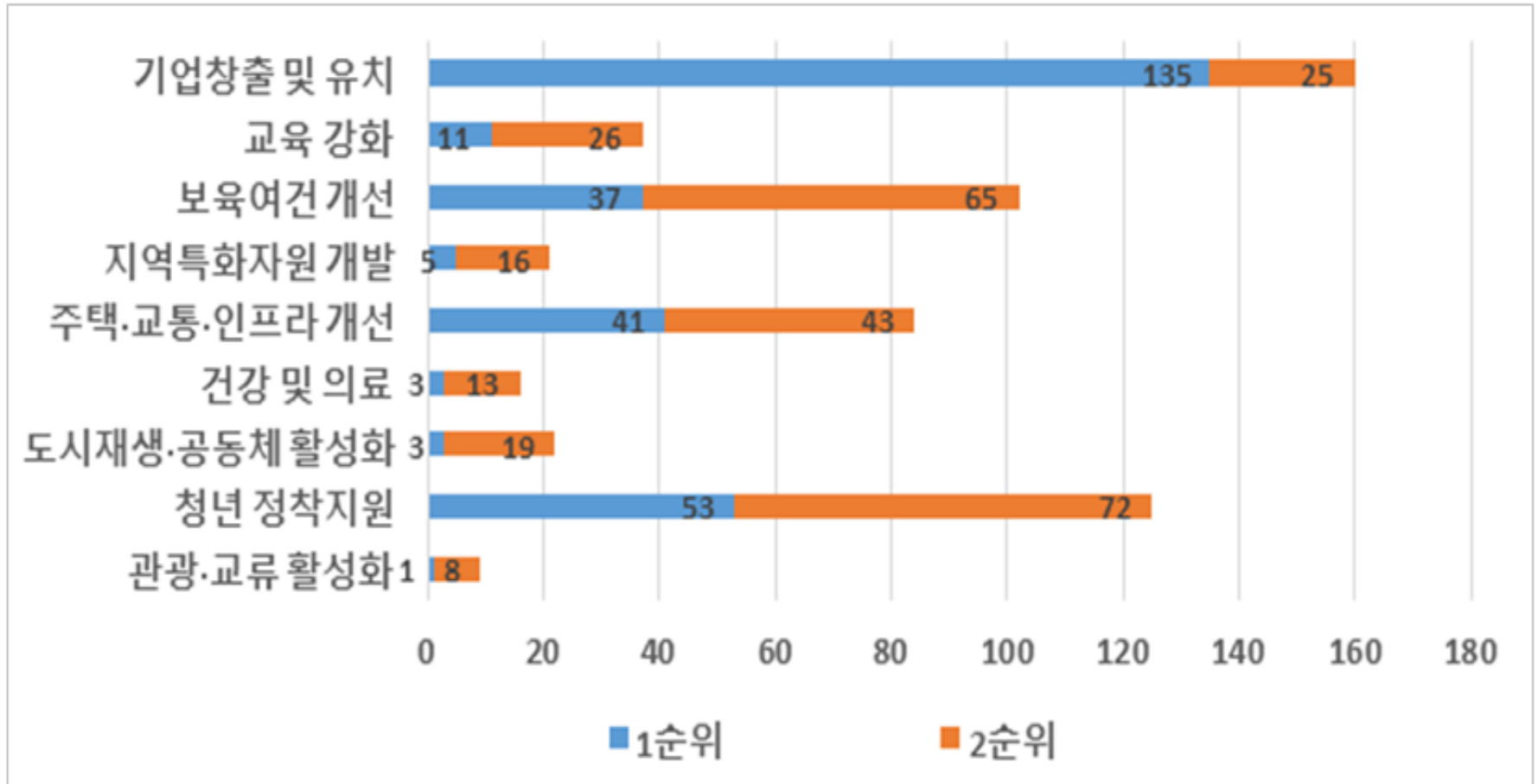
<중앙부처의 추가 지원>



<인구정책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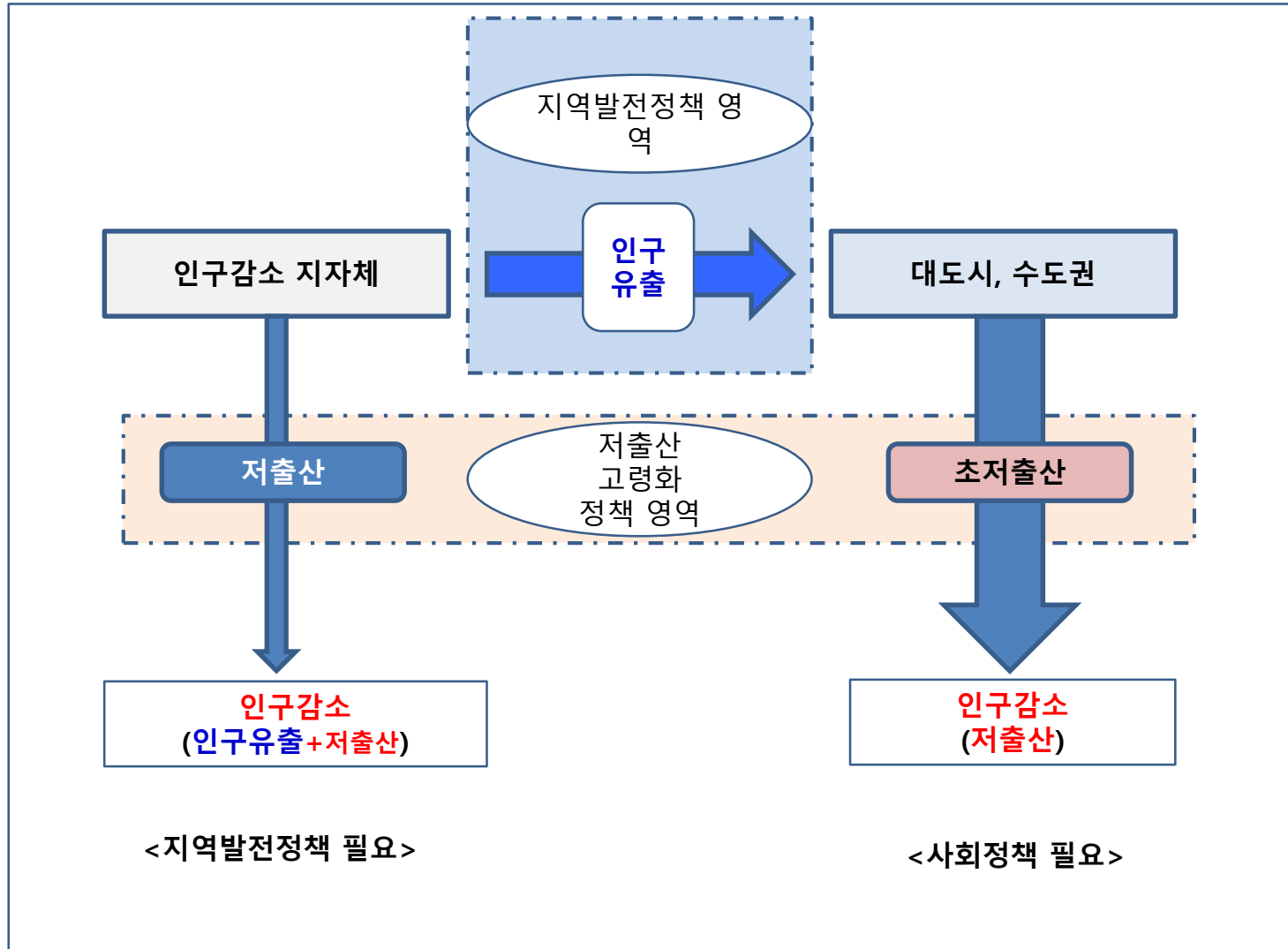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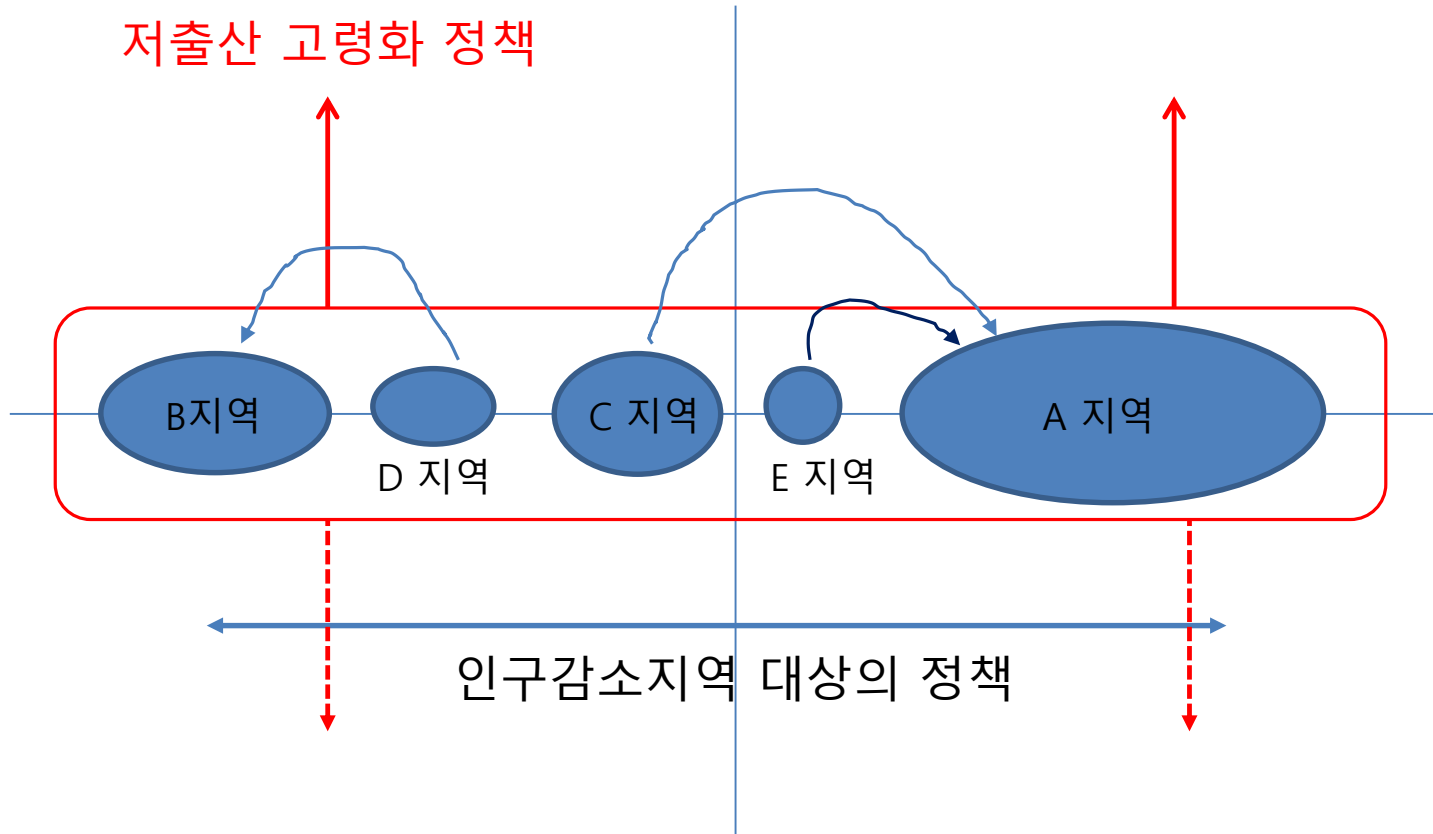
## ▣ 지원 필요 부문



#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개선과제

## ■ 관점 정리 1: 사회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의 혼돈 정리 필요





## ▣ 지역 활성화 접근과 사회정책적 접근의 차이

	저출산 · 고령화 시책	인구감소지역 시책
접근	- 국가전체의 인구증가를 위한 <b>종적인 차원의 시책</b>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b>횡적인 차원의 시책</b>
관심	- 인구의 자연증가 - 특정지역의 감소, 증가는 주요 관심의 대상이 아님 - 지역간의 횡적인 인구이동에는 관심이 없음	- 인구의 사회적 증감 - 인구의 이탈로 인한 <b>지역 공동체 자체의 붕괴 및 소멸 방지</b> - 국가 인구의 증감인 종적인 인구 증감 측면에는 관심이 없음
수단	- 저출산 대상 출산연령의 <b>출산장려 및 지원</b> , 보육지원 등 - 사회정책, <b>출산정책적 수단</b> 이 주로 동원	- 지역의 인구유출을 방지, 유지, 유입의 토대인 지역경제 활성화, <b>일자리 창출, 지역자원 특화개발</b> 관심
공간	- <b>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지역</b>	- 인구감소가 급격해서 <b>지역의 생존이 위태로운 인구감소 지역</b>

## ▣ 관점 2 : 지역간 인구의 제로섬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어서 안됨

### ○ 논점

- “국가 전체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특정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려면 결국 다른 지역의 인구를 가져와야 하는 Zero-sum 상황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

### ○ 검토

- 일견 타당한 논리지만 인구감소지역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 방지, 특정지역 집중 피해 심각

### ○ 대안

- 이상적인 상황은 전국이 고루 인구가 분포한 모양이 되겠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해체를 방지하고 포용적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의 가치에 해당

##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 설계의 방향과 내용

- 사회정책 → 지역발전정책적 접근으로 무게 중심 이동 필요
-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접근 필요
  - 도 자체 시책의 개발 및 추진 강화
- 부처 : 특성과 경험에 바탕한 사업
- 협력사업 활성화 : 지역간 협력사업(정주자립권 시책) , 부처간 협력사업

### < 내용 >

- 지역 인구감소 방지와 동시에 인구유지,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인구유지나 증가 -> 공동체 유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행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수요가 있는 사업일 것

## ▣ 시책구성의 예시

부문	내용
인구 생기 부여	-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공무원, 청년 등 파견 및 교류, 정착 등
공동체, 마을 만들기	- 스마트 빌리지, 앵커 공간 조성 등 (IT 기술 활용 포함) * 시설이나 기관 등 공동체의 사회적 자산 활용
일자리 · 경제 활력	- 지역 경제 활성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청년 창업 지원, 대도시 본사 분사 등 스마트 유치 등
융복합 강화 (내용 측면)	- 사업의 내용이 특정한 소관부처가 아닌 융복합적인 것
지역간 협력 강화	-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해서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

감사합니다

---